



## EC, 재정동맹 계획 제시

이정환 선임연구원

■ 유럽 재정위기 해법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6월 28~29일의 유럽연합(EU)정상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이란 회의론이 확산됨.

- 유럽집행위원회(EC)는 EU정상회의에서 유럽 재정위기 해법으로 유럽 은행들에 대한 공동 감독 및 구제를 내용으로 하는 은행동맹(banking union) 계획, 재정동맹(fiscal union) 계획, 성장협약을 제안함.
- EC 제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놓고 독일과 나머지 국가들의 대립으로 이번 정상회의가 의미 없이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짐.

■ 이번 EU정상회의에서는 재정위기 해법으로 단기적 방안보다는 장기적 방안이 부각됨.

- 단기적 방안에서는 독일의 주장을 대폭 수용하였음.
  - 先 재정적자 감축, 노동시장 개혁, 생산 효율성 제고, 後 구제기금 투입이라는 기존의 원칙을 고수함.
  - 독일의 반대로 유로안정화기구(ESM)가 유로존 시중은행을 직접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서에서 삭제하였음.<sup>1)</sup>
- 장기적으로 각국이 다른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해 책임을 지는,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재정동맹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
  - 통화동맹의 존속을 위협하는 재정위기와 은행권위기의 재발 방지를 위해 재정동맹을 형성하는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고 밝힘.

1)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ESM이 재정위기 국가를 거치지 않고 은행권에 직접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재정적자가 추가로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장도 이를 환영한다고 주장하였으나, EC는 구제자금은 각국의 정부를 거쳐 은행권에 지원되어야 한다는 독일의 입장을 받아들임.

■ 재정동맹 계획은 유로존 회원국의 부채를 공동구제(pooling)하되, 각국의 재정을 엄격하게 감독하는 것을 기본 골자로 함.

- EC는 사전 승인을 통해 재정위기국의 재정지출을 통제하고 유로본드 발행으로 채무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부채 규모는 점진적으로 GDP 대비 60% 이하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7개 EU회원국 또는 17개 유로존 국가들이 EC의 재정동맹 계획에 대해 합의할 경우 이번 EU 정상회의는 통화동맹이 재정동맹으로 전환되는 시발점이 될 전망.

■ 그러나 전문가들은 재정동맹 계획은 주요 쟁점 사안이 누락되어 있고, 설명이 애매모호하여 회원국들 간 의견 충돌이 예상되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함.

- 재정동맹 계획 실행 순서,<sup>2)</sup> 회원국 재정지출 승인으로 유발되는 경제자주권 문제, 재정위기국 재정권의 유로안정화기구(ESM) 이양 등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큼.

■ EU정상회의에 대한 회의론이 확산되면서 금융시장도 냉담한 반응을 보임.

- 6월 25일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발행 금리는 2012년 들어 최고로 상승하였음.
- 스페인은 목표치(20억~30억 유로)를 상회하는 30.8억 유로 규모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였으나 금리는 2011년 11월 이래 최고로 상승함.
  - 16억 유로 규모의 3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2.36%로 발행하였고(5월 0.85% 대비 1.51%p 상승), 14.8억 유로 규모의 6개월 만기 국채 금리는 3.24%로 발행(5월 1.74% 대비 1.5%p 상승).
- 이탈리아는 29.9억 유로 규모의 2014년 만기 제로 쿠폰 국채를 발행하였으나 발행 금리는 5월 4.04% 대비 0.67%p 상승한 4.71%를 기록, 2011년 12월 이래 최고로 상승하였음.

(Wall Street Journal 등, 6/26, 6/27)

2) 프랑스 등은 先 유로본드 발행, 後 재정지출감독을 주장한 반면, 독일 등은 先 재정지출감독, 後 유로본드 발행을 주장하였음.